지방행정체제 개편 넘어야 할 난관들

자리 없어질 정치권 반발 자리 줄어들 공무원 저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분위기가 과거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지만 성사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도 수차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있었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지방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우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노리는 일부 정치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광역 시·도 단체장들은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내용으로 거론되는 도(道)의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광역단체장을 노리는 중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찬성할 리 만무하다.

또 고효율·저비용 구조를 위해 시·군·구를 통합할 경우 인구가 많거나 세력이 강한 지역의 기존 민선 자치단체장은 크게 반대하지 않겠지만 인구가 적고 세력이 약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통합 이후 입지를 장담할 수 없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통합지역의 단체장 직에 도전할 경우 규모가 큰 지역의 도전자가 득표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는 지방선거를 노리는 정치권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조직 축소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방 공무원들의 저항도 불을 보듯 뻔하다. 퇴직을 강요당할 뿐 아니라 자리를 지킨 공무원에게도 승진 기회 축소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가 약한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동안 지역통폐합 과정에서도 세가 약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다. 통합 후 지역발전에서 소외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주민들을 자극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방향이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처럼 현재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하거나 고착하는 쪽으로 흐를 경우 호남과 충청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 논의 초기 단계에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 내달 입법예고

무안반도·광양만권 통합 논의 재부상

〈목포+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

전면적인 지방행정개편까지 겪어야할 어려운 과정을 감안해 정부가 내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인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가칭)이 눈길을 끈다.

전국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자발적으로 합의할 경우 생활권이 같은 시·군의 통합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전면적인 지방행정개편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통합노력을 병행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군을 통합할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된다.

전남지역에서는 ▲목포·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 등이 자율통합지원 대상 기초단체로 꼽히고 있다. 또 여수시와 여천시·군은 주민투표를 통해 '3려통합'을 이룬 바 있다.

◇**무안반도 통합 논의**=목포와 무안, 신안을 통합하자는 여론은 민선 1~2기에 형성됐으며, 통합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조사가 3차례 실시됐으나 무안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1994년 실시된 의견조사에선 목포와 무안 등 2개 지역의 통합이 다뤄졌으며, 1995년 3월엔 목포와 무안, 신안 등 3개 시·군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됐다. 1998년 3월엔 3번째로 무안반도 통합찬반 의견조사가 실시됐으나 역시 무안 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됐다.

하지만, 최근엔 전남도청 남악 이전과 정부의 서남권 발전 종합개발 계획에 힘입어 통합을 이룩해야한다는 여론이 목포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광양만권 통합논의**=여수와 순천, 광양 통합논의는 지난 2007년 당시 이들 3개 지역 시장이 통합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하는 등 급진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같은 해 9월27일 광양시가 "3시 통합에 대해 일체의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광양시는 '하동과 남해를 포함한 광양만권 도시통합 MOU 체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여수와 순천, 광양 등 3개 지역만의 통합으로 축소 논의됐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3려통합**=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3개 지역민의 자발적인 발의를 거쳐, 지난 1997년 9월9일 주민투표를 통해 이들 3개 행정구역이 하나의 여수시로 통합됐다.

여수시는 통합 이후 전체 공무원의 20%에 해당하는 549명을 감원했다. 또 시장 관사를 포함한 57동의 필요없는 관사를 매각하거나 반납한 결과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어 1999년에 예산액 대비 14.6%(584억원)였던 부채비율이 2년 후 9.8%(332억원)로 낮아졌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일자리 확충 4조여원 반영

29조원대 '슈퍼 추경' 내일 발표

정부가 성장률 2%포인트 제고와 일자리 60만개 창출을 목표로 잡은 최대 29조원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24일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23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예산안 규모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액이 11조원이 조금 넘고 세출 증액이 민생안정, 일자리 유지·창출,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미래대비투자, 지역경제 살리기 등 5개 분야에 걸쳐 16조~18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수출기업 지원과 관련,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1조9천억원 안팎을 추가로 출연해 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수출보험기금에도 2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업은행 증자 자금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재보증 재원으로 2천3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천400억원을 각각 출연해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보증공급을 2조원 늘린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이 폭증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에도 5천억원을 더 넣는다.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천억원 이상을 출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출연·출자 규모는 적어도 3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공공근로 대가로 현금과 쿠폰을 합쳐 월 83만원을 주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2조원,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3천52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3천억원, 고용유지 지원금에 3천70억원, 실업급여 확충에 1조6천억원 등이 반영됐다.

민생안정과 관련,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를 7만 가구 늘리는데 2천937억원, 긴급복지 대상에 휴·폐업·실직자 3만 가구를 추가하는데 1천573억원, 근로무능력 저소득층 50만 가구의 생계비로 4천181억원을 각각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또 실직가정과 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빌려주기 위해 근로복지기금에 4천7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오는 5월 출범하는 한국장학재단에 자본금 1천300억원을 출연해 1조3천억원의 장학채권을 발행, 대학생 학자금대출 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520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10% 내린다. /연합뉴스

美, FTA 연계 움직임·캐나다, 美 수준 개방 압박

쇠고기, 또 통상 쟁점 되나

캐나다와 미국이 쇠고기 시장의 개방이나 확대를 요구하면서 수입 쇠고기 문제가 또다시 통상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쇠고기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캐나다는 쇠고기 시장을 미국 수준으로 개방하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게리 리츠 캐나다 농림·농식품성 연방장관은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6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선을 긋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할 때가 왔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2003년까지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해 왔으나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2007년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캐나다 쇠고기에 빗장을 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 같은 언급을 '압박용'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촛불 시위'의 불씨가 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선 '30개월 미만'으로 묶인 연령 제한을 풀라는 압박이 나오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 그 주체이고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자칫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될 경우 적잖은 압력이 될 수 있다.

막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 위원장은 최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FTA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은 반드시 연령에 관계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U대회 유치" 1만명 걷기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기원 범시민 건강 걷기대회' 참가자들이 대회 성공 유치를 다짐하며 행진하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 김영진 국회의원,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김창준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장, 시민 등 1만여명이 참가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현지실사(4월6일~9일)를 앞두고 도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인천공항 간 전세기 운항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실사전략을 마련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